

06

농식품·식약

1. 농업정책자금 금리인하로 농가 금융부담 완화

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 ☎ 044) 201-1756

농업인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2016년 1월 1일부터 농업정책자금 중 농업인 대상 중장기 시설자금(잔액기준 5.3조원)에 대해 대출금리가 인하됩니다.

- 대상자금 5.3조원에 대한 금리 인하로 매년 약 314억원의 농업인 금융부담 절감효과가 기대됩니다.

※ 대출 농가 약 48만원의 금융부담 절감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

기존금리	변경금리	대상사업(중장기 시설자금)
2.5%	2.0%	농지매입경영회생지원, 농업종합자금, 원예시설현대화, 농지연금, 종축시설현대화, 식품외식종합자금, 도축가공업체지원, 시설원예효율화, 저온유통체계구축, 농식품시설현대화, 말산업육성, 한우직거래활성화지원, 첨단온실신축지원, 사료산업종합자금
2.7%	2.0%	농촌주택개량자금, 귀농인창업지원자금(주택구입자금)

- 적용대상은 2016년 신규대출 뿐만 아니라 기존 대출 잔액에 대해서도 금리를 인하할 계획입니다.

(참고)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>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 > 농업정책자금 금리인하

농업정책자금 금리인하

- 추진배경 농업인의 금융비용 부담완화
- 주요내용
 - ① 용자사업 대출금리 인하 2.5~2.7% → 2.0%
 - * 농지매입경영회생지원, 농업종합자금, 원예시설현대화, 농지연금, 종축시설현대화, 식품외식종합자금, 도축가공업체지원, 시설원예효율화, 저온유통체계구축, 농식품시설현대화, 말산업육성, 한우직거래활성화지원, 첨단온실신축지원, 사료산업종합자금(2.5% → 2%), 농촌주택개량자금, 귀농인창업지원자금 중 주택구입자금(2.7% → 2.0%)
- 시 행 일 2016년 1월

2. 국산 쌀, 중국 수출 개시

농림축산식품부 검역정책과 ☎ 044) 201-2074

「한국산 쌀 중국 수출검역요건」체결(2015년 10월) 및 「한국산 쌀의 중국 수출검역요령 (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)」이 시행(2015년 12월)됨에 따라 2016년부터 국산 쌀을 중국으로 수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

- 국산 쌀의 중국 수출을 위해서는 양국 간 합의된 식물검역요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 - 쌀 가공업체는 우리나라 식물검역기관에 수출용 가공공장으로서 등록을 하고, 중국 측의 현지실사를 받은 가공공장에서 쌀을 가공·포장하여야 합니다.
 - 수출 전 해충 방제를 위해 중국 측과 합의한 메틸브로마이드(MB)와 에피흠(PH3) 등 훈증제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며,
 - 우리나라 식물검역관이 실시하는 수출검역에 합격하여야 합니다.

(참고)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 > 국민소통 > 법령정보 > 검역본부 고시 > 한국산 쌀의 중국 수출검역요령

재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

- 추진배경 2009년 중국측에 국산 쌀 수입허용 요청하고, 협상 타결 지속 노력
- 주요내용 ① 검역기관에 수출용 가공공장 등록 및 중국측의 현지실사를 받아야 함
② 수출 전 메틸브로마이드(MB) 및 에피흠(PH₃)으로 훈증소독을 실시해야 함
- 시 행 일 2016년 1월 잠정 (* 중국측의 현지실사 결과처리 시기 등에 따라 다소 유동적)

3. 농식품 벤처·창업을 위한 기술·자금·판로·보육 원스톱 지원

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정책과 ☎ 044) 201-2453

2016년 강원·경북·전남 등 권역별 농식품 벤처창업지원 특화센터를 설치하여 농식품 벤처·창업의 기술·자금·판로지원을 위한 창업 초기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가 시행됩니다.

- 창업을 희망하는 자는 창업을 위한 기술(R&D)이나 자금, 판로 지원에 관한 정보를 각 기관별로 찾아가 상담을 받던 기존과 달리 농식품 벤처창업지원 특화센터 한 곳에서 한 번에 창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.
 - 마케팅, 경영, 회계 등 창업과 관련된 분야별 전문가가 직접 현장으로 찾아가 컨설팅을 해주는 창업 보육 지원과,
 - 창업자가 보유한 기술의 가치평가비용 지원을 통해 필요한 자금을 투·융자 받을 수 있습니다.
 - 또한 제작한 시제품은 테스트숍 형태의 판매관을 통해 시장의 반응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.
- 또한, 농식품 전문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을 구축하여 창업 초기에 필요한 자금을 적시에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.

(참고)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> 알림소식 > 보도자료 > 청년 일자리, 농업·농촌에서 찾으세요.

2016 농식품 벤처창업 활성화 지원

- 추진배경 농식품 벤처지원 특화센터 설치를 통한 맞춤형 창업지원 서비스 제공
- 주요내용 ① 기술가치평가 지원(건당 최대 1천만원, 자부담 20%)
② 농촌현장 창업 보육 지원(전문가 컨설팅비 지원, 최대 1천만원, 자부담 20%)
③ 시제품 판매관 운영
④ 농식품 전문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운영
- 시 행 일 2016년 상반기

4. 청년농산업창업지원 사업 시행 (청년 300명, 최대 2년까지 월 80만원 지급)

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 ☎ 044) 201-1518

2016년부터 농산업분야의 우수한 청년인력의 창업 초기 경영자금을 지원하여 농산업 일자리 창출 및 농업인력 기반을 확충할 계획입니다.

- 조사에 의하면, 신규농업인 중 30대 이하 비중이 2000년 29.2%에서 2010년 12.9%로 급감하고, 농업분야 창업 후 2년~3년간 낮은 수입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.
- 이에 농산업 분야의 일자리 창출과 후계농업인 육성 차원에서 성장 잠재력이 큰 39세 미만의 영농창업자(영농경력 3년 미만)에게 창업 초기 창업안정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.
 - 2016년 초에 각 도별 창업경진대회를 통해 우수한 청년 300여명을 선발하여, 영농 창업 프로그램 연수 비용과 영농 창업에 필요한 자금 등을 최대 2년간 지원합니다.
- 또한, 신규 창업농에 대한 정보교류 및 사후관리 등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.

(참고)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> 알림소식 > 보도자료 > 청년농산업 창업지원 사업

청년농산업창업지원 사업

- 추진배경 농산업 분야에 우수 청년 유입 촉진을 통한 농산업 인력기반 공고화
- 주요내용
 - ① 창업안정자금 지원 : 최대 2년간 월 80만원 지원
 - ② 청년 창업농 300명 선발을 위한 도별 창업경진대회 개최
 - ③ 신규창업농 정보교류 및 사후관리 등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
- 시 행 일 2016년 4월

5. 활기찬 농촌프로젝트 시범사업 시행

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 ☎ 044) 201-1554

농촌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을 패키지화하여 지원하는 ‘활기찬 농촌프로젝트 시범사업’을 신규로 시행합니다.

- 우수인력 및 자본이 유입되는 지역산업 육성과 함께 이를 뒷받침하는 정주여건 개선 등을 패키지 형태로 지원할 계획입니다.
 - 지원 분야: 기업유치, 창업 및 일자리, 주거, 생활여건 개선 등
- 2016년도 초에 지자체(시·군)를 대상으로 공모하여 시범사업 대상 6개 지구를 선정하고, 3년간 480억원(지구당 최대 80억원) 규모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.
- 또한, 향후 시범사업 성과 평가를 통해 활기찬 농촌의 성공 모델을 제시하고, 단계적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입니다.

(참고)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> 알림소식 > 보도자료 > 활기찬 농촌프로젝트 시범사업

활기찬 농촌프로젝트 시범사업

- 추진배경 지역 내 산업 기반 확충을 통해 농촌 활력 제고
- 주요내용
 - ① 사업기간: 2016년 ~ 2018년 (3년간)
 - ② 지원규모: 6개 지구 (2016년~2018년)
 - ③ 사업비: 1개 지구당 최대 80억원 (국비 56)
 - ④ 지원조건: 국비 70%, 지방비 30%
 - ⑤ 2016년 예산(안): 89억원 (총사업비 480억원×국비70%×1년차26%)
- 시 행 일 2016년 1월

6. 농어업인 건강·연금보험료 지원 신청절차 간소화

농림축산식품부 농촌복지여성과 ☎ 044) 201-1574

농어업인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건강보험료와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.

- 지금까지는 농어업인이 건강·연금보험료 지원 신청 확인서 제출 시, 신청인의 농어업인 여부를 이·통장 및 읍·면·동장에게 확인받도록 하였으나,
 - 개인정보 노출 및 지역 주민 간 갈등 유발 등으로 개선을 요구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.
- 이에, 2016년 1월부터는 농어업경영체 등록자의 경우 건강·연금보험료 지원 신청 시 농어업인 확인 절차를 생략하고,
 - ※ 관계기관 간(농식품부 - 해수부 - 각 공단) 농어업경영체 등록정보 자료 연계로, 농어업경영체 등록자의 경우 증빙 서류제출 면제 가능
 - 그 외 농어업인에 대한 확인은 기존 이·통장 확인 절차를 생략하고, 읍·면·동장 확인으로 간소화할 계획입니다.

(참고)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>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 > 농어업인 건강·연금보험료 지원사업

농어업인 건강·연금보험료 지원 신청절차 간소화

- 추진배경 관계기관 간 자료연계 등 협업 추진하여 민원인 불편 최소화
- 주요내용 ① 농어업경영체 등록자의 경우 건강·연금보험료 지원 신청 시 농어업인 여부 확인절차 생략
② 농어업경영체 등록하지 않은 농어업인의 경우 기존 이·통장 확인절차를 생략하고, 읍·면·동장의 확인으로 간소화
- 시 행 일 2016년 1월 이후

7. 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지원조건 변경

농림축산식품부 농촌복지여성과 ☎ 044) 201-1578

2016년부터 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지원 대상이 일부 조정되고, 상환 연체시 연체 이자가 부과됩니다.

- 지금까지는 농어촌 지역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는 학부모의 자녀 또는 농어업인 대학생 본인에게 소득에 관계없이 학자금을 지원하였으나,
 - 소득 계층 간의 실질적 형평성 제고를 위해 2016년 1학기 융자부터 농촌에 거주하는 고소득 비농어업인 (소득 9분위~10분위)의 자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- 연체 방지 및 상환 유도를 위해 2016년 1학기 대출분부터 연체 기간에 따라 3%에서 9%까지 연체 이자가 부과되고,
 - 타 학자금 대출과 동일한 연체관리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현재 10개월인 신용유의자 등록기준을 6개월로 변경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.

(참고)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> 학자금대출안내 > 학자금대출소개 > 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> 관련공지(6번)

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지원조건 변경

- 추진배경 농어촌 학자금 지원대상에 대한 실질적 형평성 제고, 대출금 상환·관리 강화 등 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
- 주요내용 ① 농어촌지역 단순거주자(비농어업인)에 대한 지원요건 변경
 - (현행) 소득분위 관계없이 지원 → (변경) 소득 8분위까지만 지원
 - * 농촌거주 농업인 및 취약계층은 소득에 관계없이 현행대로 지원② 상환관리 강화를 위한 연체이자 도입
 - (현행) 연체이자 없음 → (변경) 연체이자 부과 : 3개월 이하 (3%), 6개월 이하 (6%), 6개월 초과 (9%)③ 신용유의자 등록기간 기준 변경
 - (현행) 연체 10개월 이상 시 등록 → (변경) 연체 6개월 이상 시 등록
- 시 행 일 2016년 1학기 대출분부터

8. 가축질병 취약분야 관리 강화

농림축산식품부 방역총괄과 ☎ 044) 201-2360

2015년 12월 23일 개정 · 시행된 가축전염병예방법이 2016년부터 본격 적용됩니다.

- 구제역, AI 등 주요 가축질병이 발생한 지역과 철새군집지 인근 등을 중점관리지구로 지정하여 검사·예찰·시설 등의 기준을 보다 강화할 계획입니다.
- 축산 농가에 대한 인센티브 및 벌칙 규정을 강화하여 농가의 차단방역에 대한 인식을 확고히 하도록 하였습니다.
 - 차단방역 기준 및 이동제한 명령을 위반한 농가 등에 대한 보상금 감액기준을 구체화하고 질병관리 우수농가에 대한 보상금 감액 경감기준을 마련하였으며,
 - 가축전염병 미신고시 벌칙금을 종전 1천만원에서 3천만원 이하로 확대하고, 소독시설 미설치, 백신 미접종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도 종전 5백만원 이하에서 1천만원 이하로 상향됩니다.
- 그밖에도 GPS 장착 대상 축산차량을 확대하고, 축산농가 방역기준 마련 및 계열화 사업자에게 방역 책임을 부과하는 등 가축질병에 대한 방역 관리를 한층 강화할 계획입니다.

(참고)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> 알림소식 > 보도자료 >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

「가축전염병예방법」 개정 · 시행

- 추진배경 구제역 등 가축질병 취약분야에 대한 관리 강화와 축산농가의 차단방역 의식을 개선
- 주요내용
 - ①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 · 운영(신설)
 - ② 벌칙 (1천만원 → 3천만원 이하), 과태료 (5백만원 → 1천만원 이하) 상향
 - ③ 축산차량 GPS 장착 확대 (조사료, 쌀겨, 톱밥, 깔짚 등 운반차량, 2016년 3월 23일까지 의무 등록) 등
- 시 행 일 2015년 12월 23일

9. FTA 피해보전직불제 보전비율 상향 (90% → 95%)

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과 ☎ 044) 201-1719

2016년부터 FTA 피해보전직불제의 보전비율을 90%에서 95%로 상향하여, FTA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 보전을 강화할 계획입니다.

- 지금까지 FTA 피해보전직불제는 기준가격*과 해당연도 평균 가격 간 차액의 90%를 보전하였으나, 2016년부터 보전비율을 95%로 상향합니다.
 - * 기준가격 : 대상 품목의 직전 5년간 최고 · 최저치를 제외한 3개년도 평균가격의 90%
- 또한, 직불제 대상 품목과 수입기여도를 최종 결정하기 전에 농업인의 이의제기 절차를 신설하여 농업인의 피해보전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제도를 투명하고, 내실 있게 운영할 계획입니다.

(참고)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> 알림소식 > 보도자료 > FTA 피해보전직불제 개선

2016년도 FTA 피해보전직불제 개선

- 추진배경 한 · 중 FTA 대책 및 여야정 합의사항 (2015년11월30일) 추진
- 주요내용
 - ① 보전비율 상향 (90%→95%)
 - ② 대상품목과 품목별 수입기여도에 대한 농업인의 이의제기 절차 신설
- 시 행 일 2016년 5월~6월 (잠정, 개정안 준비 중)*
 - * 보전비율 상향은 「FTA 농어업법」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, 2016년 상반기 중 개정안 제출 · 발의 및 국회 심의가 예상

10. 학교 우유급식 사업 지원 대상 확대

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☎ 044) 201-2340

2016년부터 학교 우유급식 사업의 초·중교 지원 대상자가 확대됩니다.
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이 개정(2015년 7월)되어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이 당초 최저생계비에서 기준 중위소득과 연동한 급여별 선정기준으로 변경, 확대된데 따른 것입니다.
 - ※ (기준 중위소득)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
 - ※ (급여별 선정기준)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는 29%, 의료급여는 40%, 주거급여는 43%, 교육급여는 50% 이하의 가구
- 이에 따라, 2016년에는 초·중교생 교육급여 수급자(중위소득 50% 이하)인 340천명 수준까지 확대하여 지원할 계획이며, 향후 예산을 확보하여 고등학생까지 확대 지원할 예정입니다.

(참고)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>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 > 학교우유급식사업

2016년도 학교 우유급식 지원 사업

- 추진배경 저소득층 및 차상위계층 학생들에게 무상 우유급식을 지원하여 영양 불균형 해소 및 복지 증진을 꾀하고 우유 소비기반을 확대
- 주요내용 (당초) 저소득층 가정의 초·중·고교생,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, 특수교육 대상자, 차상위계층 가정의 초등학생, 기타 시도에서 선정한 형편이 어려운 초·중·고교생 → (2016년 추가) 초·중학생은 기초생활수급자 중 교육급여 수급자까지 확대지원
 - ※ 2016년 지원 예산 : 55,780백만원(국비 33,468백만원, 지방비 22,312백만원)
- 시행일 2016년 1월

11.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제도 도입

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☎ 044) 201-2436

2016년 상반기부터 친환경농업의 새로운 재도약을 위한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제도가 시행됩니다.

-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제도는 친환경농업인 및 조합의 거출금과 정부지원금(총 거출액의 50%이내)을 활용하여 친환경농업인 스스로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촉진, 판로확대, 수급조절, 교육 및 연구개발 등을 수행할 수 있게 함으로써 친환경농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입니다.
-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친환경농업인은 ‘자조금단체 회원 가입 및 자조금 납부 동의서’ 제출 및 자조금 납부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.

(참고)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> 알림소식 > 공지·공고 > 2016년 상반기부터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제도 도입

2016년도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제 도입

- 추진배경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촉진을 통한 친환경농산업 육성
- 주요내용 ① 친환경농업인 등은 (사)한국친환경농업협회 회원 가입신청 및 납부 동의서 제출 (2016년 1월 4일~29일, 거주 주소지 소재 읍·면·동)
② 1천㎡ 이상 유기·무농약인증 농업인(농업법인 포함), 조합은 자조금을 납부해야함 (3천원~5천원/1천㎡)
- 시행일 2016년 1월

12. 창조농업선도고교 및 농대 영농창업특성화사업 추진

농림축산식품부 경영인력과 ☎ 044) 201-1538

2016년부터 미래 농업을 이끌 젊고 유능한 청년 창업농 육성을 위해 창조농업선도고교 및 농대 영농창업특성화 사업을 신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.

- 지금까지는 농고·농대생들에 대한 취·창업 지원을 위해 농업계 고교는 사업연계 교육 사업을, 농대는 미래 전문농업경영인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.
- 올해부터는 창업 중심 직업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현장실습 중심의 교육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.
 - 농업계 고등학교 중에서 의지와 역량을 가진 3개 학교를 창조농업선도고교로 선정하여 현장실습 중심의 농업교육을 실시하고,
 - 농대는 영농창업특성화대학 5개교를 선정하여 전문기술과 경영능력을 갖춘 청년 창업농을 육성할 계획입니다.

(참고)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> 알림소식 > 보도자료 > 젊고 유능한 청년 창업농, 미래농업을 이끈다!

창조농업선도고교 및 농대 영농창업특성화사업 계획

- 추진배경 고교단계부터 현장실습 중심의 체계적인 농업 직업교육 실시
- 주요내용
 - ① 창조농업선도고교(3개교): 기존 농업계 고등학교 중 의지와 역량을 가진 학교를 선정하고 현장실습 중심의 농업 직업교육을 실시
 - ② 농대 영농창업특성화 사업(5개교): 기존 농대에 현장실습이 강화된 영농창업특별과정을 운영하여 전문기술과 경영능력을 갖춘 청년 창업농 육성
- 시 행 일 2016년도

13.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 제도 개선

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☎ 044) 201-2336

각종 FTA 체결에 따른 축산분야 경쟁력을 강화하고 축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‘축사시설현대화사업’의 지원 조건, 내용 및 규모 등이 대폭 개선됩니다.

- 우선 젊은 축산인 육성을 위하여 사업대상자의 범위를 농장 실무 경력 10년 이상이거나, 축산관련학과 졸업자(50세 이하)로 확대하였습니다.
- 규모화에 따른 축산농가 당 가축 사육 마리수가 증가하는 추세를 감안하여 전업농 등의 기준 범위를 확대하고, 증축 불허 규정 등을 폐지할 계획입니다.
- 지원 대상 축종에 말을 포함하고, 축산분야에 ICT의 확산을 위하여 ICT 확산사업 대상을 상반기에는 낙농, 하반기에는 한우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.
- 보조사업의 보조율은 낮추고 (30% → 20%), 용자 비율은 높였으며 (50% → 60%), 상환기간도 연장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.

(참고)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>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 > 축사시설현대화사업

축사시설현대화사업 지침 등 개선

- 추진배경 FTA에 따른 개방 확대 및 국내 축산기반 변화에 따른 축산업 육성방향을 전환하고, 조기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개선 필요
- 주요내용
 - ① (지원조건) (당초) 보조 30%, 용자 50%(3년 거치 5년 상환) 자부담 20% → (2016년) 보조 20%, 용자 60%(5년 거치 10년 상환), 자부담 20%
 - ② (사업대상) (당초) 2014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축산업 등록허가 후 가축을 사육중인 농가 및 법인 → (2016년 추가) 농장 실무경력 10년 이상이거나, 축산관련학과 졸업자 (50세 이하)
 - ② (지원대상, 지원 범위 등) 첨부 참조
- 시 행 일 2016년 1월 1일

14. 한·뉴질랜드 FTA에 따른 농업분야 협력사업 실시

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☎ 044) 201-2320

2016년부터 한·뉴질랜드 양국은 FTA 이익균형 차원에서 농축산업 훈련비자 프로그램, 농촌지역 청소년 어학연수, 대학원 장학금 지원 등 5개 농업협력사업을 실시합니다.

- 농고와 농업관련 대학 졸업 예정자(또는 졸업후 2년이내) 50명을 대상으로 뉴질랜드 현지에서 농축산업 분야의 교육(3개월)과 직무연수(9개월)가 가능한 비자발급을 지원합니다.
- 매년 최대 150명의 우리나라 농업인 자녀(중학생 100명, 고1학년~2학년생 50명)에게 뉴질랜드 어학연수 기회를 제공하고,
 - 농업 학과 졸업생 중 뉴질랜드 대학원 진학 희망자(박사과정 4명)를 대상으로 항공료·장학금·체재비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.
- 또한, 질병위험 분석(6명), 산림연구 분야(1명) 전문가를 뉴질랜드 연구기관에 파견하여 훈련·연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.

(참고)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> 알림소식 > 보도자료 > 한-뉴질랜드 FTA 협력사업

2016년 한-뉴질랜드 FTA 협력사업 프로그램

- 추진배경 뉴질랜드의 선진 농축산기술을 국내로 도입하여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, 농업인 자녀 영어연수 지원을 통한 농촌 생활여건 개선

프로그램 명	프로그램 내용
농축산업 훈련 비자	뉴질랜드 현지에서 농축수산업 분야의 교육(3개월) 및 직무연수(9개월)가 가능한 비자를 발급받는 50명에 대한 지원
농촌지역 청소년 어학연수	농업인 자녀 중 초등 5학년~고등 2학년 학생 연간 150명을 대상으로 어학연수 지원(최대 8주)
한-뉴 농업협력장학금	수의과학, 산림 분야별 매년 최대 2명에게 뉴질랜드 내 대학원 장학금 지원(최대 3년)
농림 분야 전문가 훈련·연구협력	질병위험 분석(6명), 산림연구(1명) 분야 공무원을 뉴질랜드로 파견하여 훈련·연구를 지원(2주~6개월)
수의역학분야 공동워크숍	수의역학분야 국제 워크숍을 한·뉴 교대로 개최
비용부담	양국 정부가 50:50으로 부담(단, 농축산업 훈련비자 제외)

- 시 행 일 2016년 1월

15. 가축사육업 허가·등록대상 확대

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☎ 044) 201-2317

축산법 시행령의 개정·시행으로 소·돼지·닭·오리에 대한 가축사육업의 허가·등록대상을 2016년 2월 23일부터 소규모 농가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.

- 소·돼지·닭·오리의 사육시설 면적이 50㎡를 초과하는 기존 가축사육업 등록농가는 2016년 2월 23일부터 허가대상으로 전환되며,
 - 1년 이내(2017년 2월 22일까지)에 축산시설과 장비 등의 허가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.
- 닭·오리·거위·칠면조·메추리·타조·꿩 중 가축사육시설 면적이 10㎡이상 15㎡미만인 농가는 2016년 4월 13일부터 가축사육업 등록을 해야 하고,
- 종계·종오리업·부화업·닭(산란계·육계)·오리 사육업 허가농가는 2016년 10월 13일까지 방역·소독·장비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.

(참고)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> 국민소통 > 법령정보 > 축산법시행령

가축사육업 허가·등록대상 확대 등

- 추진배경 가축방역 및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 (* 축산법 시행령 제13조 관련)
- 주요내용 2016년 2월 23일부터 가축사육업 허가대상을 가축사육면적 소규모 농가까지 확대

축종	〈2015년 2월 22일 이전〉~ 전업규모까지	〈2015년 2월 23일 이후〉~ 준전업규모까지	〈2016년 2월 23일 이후〉~ 소규모까지
소	600㎡ 초과	300㎡ 초과	50㎡ 초과
돼지	1,000㎡ 초과	500㎡ 초과	50㎡ 초과
닭	1,400㎡ 초과	950㎡ 초과	50㎡ 초과
오리	1,300㎡ 초과	800㎡ 초과	50㎡ 초과

- 시 행 일 2016년 2월 23일

16. 축산관련 종사자 온라인 보수교육 시행

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☎ 044) 201-2317

구제역, AI 등 가축 질병 발생 등으로 집합교육이 불가능한 경우를 대비하고, 축산관련 종사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‘축산관련 종사자 온라인 보수 교육프로그램’이 2016년 1월 1일부터 상용화됩니다.

- 기존 집합 교육 정보시스템을 온라인으로 구현하고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여 온라인을 통한 상시 교육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.
-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자체 담당공무원, 농축협 등 195개 교육 운영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시스템 교육을 실시하였고,
- 2015년 12월에는 100여명의 축산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시범교육을 실시하여, 정식 운영 전에 발생하는 문제점과 보완사항 등을 개선하였습니다.

또한, 컴퓨터 사용미숙자를 위한 원격지원 시스템을 갖추고, 휴일 이용자를 위한 지원센터 운영 및 학습상담을 실시하는 등 온라인 교육을 활성화 시켜 나갈 계획입니다.

(참고)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> 알림소식 > 보도자료 > 축산관련종사자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

축산관련 종사자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운영

- 추진배경 집합교육의 한계를 보완하고 축산 종사자 편의 제공 확대
- 주요내용 기존 집합 교육 정보시스템을 온라인으로 구현하는 한편,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여 온라인을 통한 상시 교육이 가능하도록 조치
- 시 행 일 2016년 1월 (2015년 12월 시범운영 실시)

17. 광역축산 악취 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확대

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축산팀 ☎ 044) 201-2375

축산으로 인해 발생하는 악취를 저감하고, 가축분뇨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2016년부터 광역축산 악취 환경개선사업이 시행됩니다.

- 지금까지는 악취 저감 및 분뇨 자원화를 위해 개별시설 및 공동자원화 시설 등에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비를 지원하였으나,
 - 기존 방식으로는 대단위 축산단지 등의 분뇨를 처리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.
- 특정지역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분뇨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시설을 조성하는데 자금을 지원(3개소, 개소당 40억원 규모)할 예정입니다.
- 또한, 개별 축산농가도 악취 저감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전문가 컨설팅 등을 통해 시설 보완 및 처리 방법 등을 지속적으로 지도해 나갈 계획입니다.

(참고)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>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 >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 사업

광역축산 악취 환경 개선

- 추진배경 축산악취 저감 및 가축분뇨의 적정처리를 통한 환경오염 방지 등 지속 가능한 친환경축산업 육성
- 주요내용 ① 광역축산악취환경개선 : 40억원 내외 / 3개소(시·도)
② 지자체는 가축분뇨의 공동처리 의무, (1순위) 악취저감, (2순위) 퇴액비, (3순위) 정화개보수, (4순위) 액비저장조, (5순위) 기계·장비 등 지자체 여건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농식품부에 제출하고 심사를 통해 지원을 받음
- 시 행 일 2016년 1월

18. 동물장묘업 등록기준 등 개선

농림축산식품부 방역관리과 ☎ 044) 201-2383

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적용받던 동물장묘업이 2016년부터는 「동물보호법」에 등록기준이 신설되어 적용을 받게 됩니다.

- 지금까지 동물장묘 시설은 폐기물관리법 상 폐기물 처리 시설로 분류되어 폐기물관리법의 적용을 받았으나,
 - 2016년 1월 21일부터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등록기준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.
- 따라서,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서 또는 설치신고증명서 제출이 폐지되고, 동물화장시설의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검사가 생략되는 등 규제가 완화됩니다.
- 또한, 동물 건조장 시설의 정기검사도 3개월 1회에서 6개월 1회로 검사주기가 완화됩니다.

(참고)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> 알림소식 > 보도자료 > 동물장묘업등록기준 등 개선

동물장묘업 등록기준 개선

- 추진배경 폐기물관리법 개정 (2016년 1월 21일 시행)됨에 따라 동물장묘시설에서 처리되는 동물의 사체가 폐기물 관리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,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포함
- 주요내용
 -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서 또는 설치신고증명서 폐지
 - ② 동물화장시설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검사 제외
 - ③ 동물건조장시설 정기검사 주기 완화 (3개월 1회 → 6개월 1회)
- 시 행 일 2016년 1월 (잠정)

19. 농업보조금 집행 및 관리의 투명성 제고

농림축산식품부 창조행정담당관실 ☎ 044) 201-1384

2016년 1월부터 농업보조금의 지원을 받는 보조사업의 집행 및 관리를 강화하여 보조금 부정수급 요인을 최소화하고, 투명성을 제고할 계획입니다.

- 지금까지는 보조금을 지원받는 자가 직접 업체를 선정함에 따라 상호 유착에 의한 사업비 부풀리기, 자부담 편취 등 보조금 부정수급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습니다.
- 금년부터는 보조사업을 수행할 업체 선정 시, 입찰 대상이 되는 범위를 당초 5억원에서 2억원(물품 및 용역구매는 5천만원)을 초과하는 보조사업까지 확대하여 운영 계획입니다.
 - 이 경우, 조달청이나 지자체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합니다.
- 또한, 보조금을 3억원 이상 지원받는 보조사업의 경우, 회계법인 등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정산서류의 검증을 받도록 함으로써 허위 서류 제출에 따른 보조금 부정수급 요인을 최소화하도록 하였습니다.

(참고)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> 알림소식 > 보도자료 > 법령정보 > 「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」

농업보조금 집행 및 관리 강화

- 추진배경 농업보조금 집행 및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
- 주요내용
 - ① 보조사업 규모가 2억원(물품 및 용역구매는 5천만원)을 초과하는 경우 지자체·조달청에 위탁거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보조사업 수행 업체 선정
 - ② 지원받는 보조금이 3억원 이상인 경우 집행내역에 대해 전문회계법인의 검증을 받아 정산
 - ③ 사업 수행 업체 선정시, 보조사업자의 임직원, 직계존비속 등이 운영하는 업체 제한
- 시 행 일 2016년 1월 1일 (잠정)

20. 「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시행

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☎ 044) 201-2217

2016년 6월부터 「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이 제정·시행됩니다.

- 이 법을 근거로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지역농산물 및 직거래 사업장의 설치·개설·운영, 판로개척, 컨설팅, 안전성 검사 및 우수사례 홍보·포상 등 각종 지원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.
- 우수 직매장에 대한 인증제를 도입하여 지역농산물 직거래를 선도·확산할 핵심주체를 집중 육성할 수 있게 되고,
- 유사 직매장의 난립을 방지하여 농업인과 소비자는 공인된 직매장에서 안심하고 농산물을 직거래 할 수 있게 됩니다.

지역농산물 이용 및 직거래 활성화를 통해 소비자는 합리적인 선택의 기회를 제공 받을 수 있게 되고, 농가는 다양한 판로 확보를 통해 안정적인 소득을 얻게 되어, 지역 농업경제가 활력을 찾을 것으로 기대됩니다.

(참고)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> 국민소통 > 법령정보 > 「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

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

- 추진배경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통한 농업인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
- 주요내용 ①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시행
②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제 시행
- 시 행 일 2016년 6월 23일

21. 「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」 시행

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 ☎ 044) 201-2240

2016년 1월부터 차 재배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국민 건강에 이바지하기 위해 「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」이 제정·시행 됩니다.

- 차산업 육성과 차 이용의 촉진에 관한 기본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, 차산업의 기술 개발 및 진흥 등을 위한 차산업 발전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할 계획입니다.
-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의 마련을 위해 차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도 실시할 계획입니다.
- 또한, 차의 품질 향상 등을 위해 차 생산자로 하여금 차 잎의 채취시기와 상태 등에 따라 품질 등을 구분하여 표시할 수 있도록 「차의 품질 등의 표시 기준을 설정 운영」할 계획입니다.

(참고)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> 국민소통 > 법령정보 > 「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」

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· 시행

- 추진배경 농업인 소득증대 및 국민의 건강한 생활 도모
- 주요내용 ① 차산업 발전 등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시행
② 차의 품질 등의 표시제 시행
- 시 행 일 2016년 1월 21일

1. 순대, 계란, 떡볶이 떡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 강화

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소비안전과 ☎ 043) 719-2856 | 축산물위생안전과 ☎ 043) 719-3246

국민들이 즐겨먹는 순대, 계란, 떡볶이떡 등 생활 밀착형 식품에 대한 해썹(HACCP) 의무적용을 가속화하여 보다 안전한 식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.

* HACCP: 식품의 원재료부터 제조·가공·조리·유통의 전 과정에서 발생 우려가 있는 위해요소를 확인·평가하고 중점관리요소를 지정·관리하는 과학적인 사전 예방적 관리 시스템

- 남녀노소 구분 없이 일상생활에서 다소비 되는 순대, 떡볶이 떡, 계란 등을 생산·가공하는 업체는 연매출이 1억원 미만인 곳이 전체의 76%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해썹 의무화를 위하여는 정부 지원이 절실한 실정입니다.
 - 이에 정부에서는 이들 업체에 대한 해썹 적용이 원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썹 컨설팅 비용 40%(최대 320만원)와 시설개선 자금의 70%(최대 1,400만원)를 지원할 계획입니다.
- 이를 통해 2017년까지 전체 떡볶이 떡 생산량의 90%를 차지하는 업체들과 순대와 계란 생산·가공장 전체에 대해 해썹 적용이 완료되어 소비자에게 보다 안전한 식품이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

(참고)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> 알림 > 보도자료 > 국민 간식 안전관리 강화 (2015년 11월 10일)

2016년도 생활밀착형 식품 해썹 적용 확대

- 추진배경 순대, 계란, 떡볶이 떡 등 생활밀착형 식품의 해썹 적용 확대
- 주요내용 ① 시설개선자금, 컨설팅 비용 지원으로 생활밀착형식품의 조속한 해썹 적용
② 2017년까지 떡볶이 떡의 90%와 순대 및 계란 가공식품 전체가 해썹적용
- 시 행 일 2016년 1월

2.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보상범위, ‘사망’에서 ‘장애’까지 확대

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 ☎ 043) 719-2705

2016년 1월 1일부터 의약품 부작용으로 장애가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도 장애일시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.

- 의약품의 정상적인 사용 후 발생한 부작용 피해에 대해 별도의 소송 없이 보상받을 수 있는 “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”가 2014년 12월 19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어,
 - 2015년은 의약품 부작용으로 사망한 경우 사망일시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지만, 2016년부터는 장애에 대한 보상과 사망에 따른 장례비를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.
 - 의약품 부작용에 대한 피해구제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‘피해구제급여 지급 신청서’와 장애 상태를 밝힐 수 있는 진단서 등 구비서류를 한국약품안전관리원에 우편 또는 방문하여 제출하면 됩니다.
- 이로써, 의약품 부작용 피해를 받은 국민이 복잡하고 어려운 소송절차 없이도 신속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더욱 강화하고 국민행복시대 구현에 기여할 것 입니다.

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보상범위, ‘사망’에서 ‘장애’까지 확대

- 추진배경 의약품의 정상적인 사용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게 발생한 부작용 피해에 대해 소송없이 보상받을 수 있는 ‘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’ 제도 확대를 통한 국민 행복시대 구현
- 주요내용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보상범위를 ‘사망’에서 ‘장애’까지 확대 실시함에 따라, 2014년 12월 19일 이후에 의약품 부작용으로 발생한 장애 피해에 대해 장애일시보상금 지급
- 시 행 일 2016년 1월 1일

3.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통합 운영·관리를 위한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·운영

식품의약품안전처 중앙센터설립TF ☎ 043) 719-2313

전국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(이하, '지역센터'라 함)의 통합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어린이 급식의 위생·영양 수준을 향상시키고 이를 통한 어린이 건강증진에 기여할 계획입니다.

지역센터 지원 범위 확대*에 따른 신규센터 증가**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·운영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일관성 있는 전문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.

* 지원범위 확대: 집단급식소 (8,485개소, 61만명) → 급식소 (47,915개소, 143만명)

** 센터 설치·운영 현황: (2011년) 12개소 → (2013년) 88개소 → (2014년) 142개소 → (2015년) 190개소

-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는 지역센터에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표준화된 식단 및 레시피 개발은 물론, 직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단계별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어린이 급식의 위생·영양 수준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.

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·운영 추진 계획

- 추진배경 지역센터는 현장중심 업무에 집중토록하고, 센터별로 수행하는 공통업무는 협업 및 지식 공유를 통해 일괄지원 할 수 있도록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·운영
- 주요내용
 - ① 지역센터의 표준 식단 및 레시피 개발 및 보급, 급식지원관리통합정보시스템 구축
 - ② 지역센터의 어린이 대상 교육자료 개발 및 직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단계별 교육 콘텐츠 개발
 - ※ 위탁사업(식품관련 기관 또는 단체): 공개경쟁입찰을 통한 공모
 - ※ 운영예산: 2016년: 711백만원 (신규반영)
- 시 행 일 2016년 2월 (예정)